

P.I.R.A.M 국어 생각의 절정  
LEET언어이해 선별집 3주차 해설지

**3주차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19LEET [19~21] 인문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 ☆☆☆☆

**1문단 (1)**

① **심신 문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오래된 철학적 문제이다. ②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이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신경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그 둘은 동일하다는 **동일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③ 그러나 똑같은 정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물질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인간과 정신 상태는 같지만 물질 상태는 다른 로봇이 등장한다면 동일론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① #화제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심신 문제'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心)'과 '신(身)'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것이네요. 이 지문은 '정신'과 '물질'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전개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②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비교/대조**

'심신 문제'에 대한 답으로 먼저 '이원론'이 제시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정신'과 '물질'을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네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들이 '동일'하다는 '동일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 과학이 발달하여 '정신'이 사실 '물질'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겠죠.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두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③ #재진술**

이렇게 각광받는 '동일론'이지만,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대한 납득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신' 상태가 동일하더라도 '물질' 상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신'과 '물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정신' 상태를 가져도 다른 '물질'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동일론'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나아가 인간과 '정신' 상태는 같지만 '물질' 상태는 다른 로봇이 등장한다면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로봇'의 경우에도 '정신'이 같을 때 '물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준 것이죠? 두 가지 문제점이 아니라, 동일한 '정신' 상태인데 다른 '물질' 상태를 가지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 가지 문제점으로 재진술되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동일론'의 정의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 심신 문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오래된 철학적 문제이다.

'심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라는 정의를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것이 곧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화제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인문 지문에서, 첫 문단의 첫 문장은 화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깐요.

**1문단 (2)**

④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기능적·인과적 역할로써 정신을 정의하는 기능론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⑤ 기능론에서는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되므로 그 둘이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다르면서도, 정신의 인과적 역할이 뇌의 신경 세포에서든 로봇의 실리콘 칩에서든 어떤 물질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동일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과거에 이미 쇠퇴한 '이원론',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일론'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론'이 제시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수식된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해요! '입력'이 들어올 때 '출력'을 내보내는 '기능적·인과적' 역할로 '정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입력'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기에 '기능/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네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신'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능론'은 '정신'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걸 체크해야 진짜 정의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⑤ #재진술**

이러한 '기능론'에서는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된다고 해요. '물질'이 있어야 '정신'이 '기능적·인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정신'과 '물질'이 아예 '별개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원론'과의 차별점이 생기네요.

나아가 '정신'의 이러한 인과적 역할이 어떤 '물질'이든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론'이 설명하지 못한 '같은 정신, 다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요. '같은 정신, 다른 물질'의 상황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저 '정신'의 역할을 제시했을 뿐인 '기능론'의 입장을 모순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기능론'이라는, '정신'의 '기능적·인과적' 역할을 통해 '심신 문제'에 접근하려는 이론이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론'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화제로 삼아서 전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대하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2문단 (1)**

① 그래도 정신 상태에는 물질 상태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에서는 '나'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험하는 그 느낌에 주목한다. ② 잘 익은 토마토를 봤을 때의 빨간색의 느낌, 시디신 자두를 먹었을 때의 신 느낌, 꼬집힐 때의 아픈 느낌이 그런 예이다. ③ 이런 질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 곧 현상적인 감각 경험을 철학자들은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① #화제의 흐름**

'기능론'이 주인공이 되어서 지문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다시 '이원론'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동일론'과 '기능론'을 잊으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 지문을 불친절하게 만들지 모르니까요. 일단 '이원론'에서는 '주관적'인 경험을 할 때의 '느낌'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이해해봅시다.

**②~③ #사례-원리 연결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친절하게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의 '느낌', 신 '느낌', 아픈 '느낌' 등은 모두 '다른 사람  
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험하는 것'이죠? '이원론'은 이  
러한 '느낌'에 주목하는데, 철학자들은 이러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감각질'이라고 부릅니다. '감각'하는 '질'적인 경험하기에 '감각/질'이라  
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감각질'을 가져  
온 것일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런 질적이고 주관적인 감각 경험, 곧 현상적인 감각 경험  
을 철학자들은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감각질'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현상적인 감각 경험'  
이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  
험하는 감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각질'의 정의를 '재  
진술'을 바탕으로 불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2문단 (2)**

④이 감각질이 뒤집혔다고 가정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론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⑤나에게 빨강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초록으로 보이고 나에게 초록으로 보이는 것이 그  
에게는 빨강으로 보인다는 사고 실험이 그것이다. ⑥다만 각자  
에게 느껴지는 감각질이 뒤집혀 있을 뿐이고 경험을 할 때 걸  
으로 드러난 행동과 하는 말은 똑같다. ⑦예컨대 그 사람은 신  
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똑같이 초록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추며, 초록 불을 보고 똑같이 "초록 불이네."라고 말한  
다. ⑧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각질이 뒤집혀 있는지 전혀 모른다.  
⑨감각질은 순전히 사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같은지를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⑩그렇다면 나와 어떤 사  
람의 정신 상태는 현상적으로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같으므로,  
현상적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기능적·인과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논박이 가능하다.

**④ #화제의 흐름**

'감각질'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했더니, 이것이 뒤집혔다고 가정하는  
'사고 실험'(실제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진행  
하는 실험)을 통해 '기능론'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  
기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면, 1문단으로 돌아가서 '기능론'의 정  
의를 다시 체크하고 와야 해요. '정신'의 '기능적·인과적' 역할에 주목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인지하고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⑤~⑥ #정의 제시**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빨강'과 '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상황  
'사고'하여 만든 '실험'입니다. 그런데 '감각질'이 뒤집혀 있을 뿐, 경험을  
할 때 걸음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은 똑같다고 합니다.

**⑦~⑩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친절하게 사례를 들어주고 있네요.  
여기서 신호등을 '건너는' 것, 그리고 "초록 불이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행동'과 '말'에 해당하겠죠? '초록 불'과 '빨간 불'을 바  
라볼 때의 '감각질'은 뒤집혀 있지만, '행동'과 '말'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례와 원리를 일대일로 대응하면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서로 '감각질'이 뒤집혀 있다는 사실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모른다고 해요. 9번 문장에 따르면, 그 이유가 '감각질'이 순전히 사적  
이며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같은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말을 보자마자 1번 문장의 재진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  
 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사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감각질을 내가 경험할 수도 없기에 다른 사람의 감각질과 같은지 확인  
 할 수 없는 것이죠. '감각질'의 정의 그 자체이므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⑩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렇게 되면, 나와 어떤 사람의 '정신' 상태는 '현상적'으로 다르지만 '기  
 능적'으로는 같게 됩니다. 여기서 '현상적=감각질=입력', '기능적=행동  
 과 말=출력'으로 재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중 하나는 다르고 하나는 같다면 모순적이라는 것이  
 죠. 이번에도 '재진술'에 대한 '생각'을 통해 불친절한 지문을 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이 '기능론'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상적'  
 인 감각 경험, 즉 '정신' 상태도 존재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능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입니다. 이 흐름을 잡  
 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이 조금만 더 불친절해진다면, 여기서 '기능  
 론'이라는 이름을 빼버릴 거예요. 그때도 '기능적'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기능론 비판'이라는 흐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 불  
 친절함을 제거하는 과정, 최근의 어려운 지문 독해의 핵심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⑩그렇다면 나와 어떤 사람의 정신 상태는 현상적으로 다르지  
 만 기능적으로는 같으므로, 현상적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기능  
 적·인과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론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논박이 가능하다.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을 사례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능론 비판'이라는 큰 흐름까지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불친절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다.

**3문단 (1)**

①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이 성공하려  
 면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색 경험이 현상  
 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②두 경험이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두 사람의 색 경  
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③다시 말해서 색들이 가지는  
관계들의 구조는 동일한 패턴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④예를 들  
 어 나의 빨간색 경험과 노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들이 다른 사람의 빨간색 경험(사실은 초록색 경험)과 노  
 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들과 동일해야 한다.  
 ⑤그래야 두 사람이 현상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더라도 기능적  
 으로 동일하기에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것이 탐지 불가능하다.

**① #재진술**

이러한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이 성공하려면,  
 두 사람의 색 경험이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르지 않  
 야야 합니다. 이는 앞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죠? 이 조건이 만족

되는 순간, 정신의 '현상적' 측면을 무시하는 '기능론'에는 비판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②~③ #재진술**

그런데 여기서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를 '색들이 가지는 관계들의 구조는 동일한 패턴'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재진술하고 있어요. 연결해보면, '색 경험 공간=색들이 가지는 관계들의 구조, '대칭적=동일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색으로부터 경험하는 관계들이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④~⑤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출제자도 이걸 알았는지,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경험'과 '노란색 경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특성이 두 사람에게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해요. 앞 문장들과 최대한 엮어서 이해해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부터 경험하는 관계들이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초록색'과 '노란색'으로부터 경험하는 관계들과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네요. 이들은 사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색(빨간색/초록색)의 관계를 경험한 것인데, 이로부터 얻게 되는 관계들의 구조가 같다면 같은 '행동이나 말', 즉 '기능적'으로 동일한 '출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색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출력을 내보낸다면, 서로 다른 '현상적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없겠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현상적 경험', 즉 '감각질'은 지극히 사적이니까요. 따라서 상대의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원론의 기능론 비판'이 성공적이게 됩니다.

사실 말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2문단의 '기능론 비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현상적'으로는 달라도 '기능적'으로만 같다면, '현상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즉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감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3문단 (2)**

⑥그러나 색을 경험한다는 것은 색 외적인 속성들, 예컨대 따뜻함과 생동감 따위와도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색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게 된다. ⑦빨강-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빨간색으로 보일 것인데, 이 경우 그가 초록이 가지는 생동감 대신 빨강이 가지는 따뜻함을 지각할 것이기 때문에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⑥ #사례-원리 연결 #화제의 흐름**

하지만 '색 경험'은 '따뜻함, 생동감' 같은 '색 외적인 속성'들과도 관련되어 있기에, 색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칭적'이어야만 '기능론 비판'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제의 흐름이 '기능론 비판'에서 '기능론의 재반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원론'에서 주장한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어요. 색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이죠!

**⑦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초록색' 토마토를 보고서 '빨간색'의 '따뜻함'을 지각한다고 해요.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적'이기에, '초록색'의 특성과 '빨간색'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특성은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상적 경험'을 다르게 한다면 다른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특성'을 다르게 인식했다면, 당연히 '행동'도 달라지겠죠? 이때의 '행동'은 '기능적=출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현상적으로 다르다면 기능적으로도 다르므로,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원론'에 대한 '기능론'의 재반박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리면, '감각질'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정신은 다른 '출력', 즉 '기능'을 내보내기에, '감각질'은 다르지만 '행동'은 같은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행동'과 '말'을 출력한다면 그것은 곧 '현상=감각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뒤집힌 감각질'은 정신의 '기능적' 역할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원론'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기능론'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엮어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정의를 다시 써 주지 않는 '불친절함'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의 힘'으로 이 지문을 친절하게 만든 모습이에요.

**4문단**

①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서 성공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②그런 까닭에 이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①~② #재진술 #화제의 흐름**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내용이었습니. 색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기에 '이원론'의 주장은 무의미하고, 따라서 '기능론 비판'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능론'의 정의를 바탕으로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지문이었습니.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

- ① 동일론에서는 물질 상태가 같으면 정신 상태도 같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동일론의 주장 그 자체 아니야?
해설	'물질' 상태가 같으면 '정신' 상태도 같다는 것, '동일론'의 주장 그 자체죠? '동일론'이 설명할 수 없는 건 '정신' 상태는 같은데 '물질' 상태가 다른 경우였 습니다.

- ② 이원론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각질이 어떠한지 확인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행동과 말은 같다고 했지.
해설	'행동과 말'은 정신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 입니다. '이원론'에서는 '현상적'인 경험이 달라도 이러한 '기능적'인 내용은 같을 수 있다는 논리로 '기능

	론'을 비판했어요. 즉, '행동과 말'은 '현상적' 경험이 달라도 같을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감각질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죠.
--	---

③ 기능론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물질 상태는 달라도 정신 상태는 같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능론은 동일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해설	'기능론'은 '정신'을 '기능적·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질 때 서로 다른 '물질' 상태를 가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일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준 것이었죠. '기능론'의 정의를 체크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어야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④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기능론으로는 정신의 인과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능적·인과적 측면에만 주목한다는 걸 비판하는 것이지.
해설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이 비판하고자 하는 '기능론'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핵심은 '기능론'이 정신의 '현상적'인 측면, 즉 '감각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기능론'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정신의 '기능적·인과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고, 이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며 비판하는 게 '이원론'의 주장이었죠.

⑤ 이원론과 기능론은 정신 상태를 갖는 존재의 물질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1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원론이랑 기능론이 물질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설	일단 '이원론'에서는 '정신' 상태를 갖는 존재의 '물질' 상태를 인정할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을 '이원적'이라고 주장하니까요. 나아가 '기능론' 역시 '정신'이 '물질'로부터 구현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질' 상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각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20. [비평]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성공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비평]을 받기도 한다.
---

- 미리 답을 골라놓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평'은 "색 경험 공간이 비대칭적이기에 현상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같은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예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찾아봅시다.

① 색 경험 공간은 대칭적이어서,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상적으로 동등하고 기능적으로 다를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적이지.
해설	일단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틀린 선지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현상적'으로 '동등'하고 '기능적'으로 '다를'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이죠? 반대로 써야 합니다.

②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적이어서,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상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동등할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각한 내용 그대로네.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 그대로죠? 이 선지를 보기 전부터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말이죠.

③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은 입력이 같으면 출력도 같으므로, 그의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탐지할 수 없다.

④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은 입력이 같아도 출력이 다르므로, 그의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사실은 탐지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색 경험 공간 이야기 안 하면 틀린 거지.
해설	일단 '색 경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답이 될 수는 없는 선지들입니다. 다만 '입력'과 '출력'에 대한 내용은 볼 만하죠? 여기서 말하는 '입력'은 '현상적=감각질'에, '출력'은 '기능적=행동과 말'에 대응됩니다. 따라서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끼리는 '입력'이 같으면 '출력'도 같고, 뒤집힌 사람은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입력'이 같아도 '출력'이 다르다는 말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력', 즉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도 '입력', 즉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죠.

⑤ 정신 상태의 현상적 감각 경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능적 역할만으로 정신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색 경험 공간 이야기 안 하면 틀린 거지.
해설	이번에도 '색 경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답이 될 수는 없는 선지입니다. 나아가 이 문제에서 말하는 '비판'은 '기능론'의 입장 이기에, '기능적' 역할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정답과는 크게 어긋난 내용이지요? 이는 '이원론'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21.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
- ㉡ 빨강-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

빨강과 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러 세면대로 갔다. 세면대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쪽지는 빨간색으로, 차가운 물이 나오는 쪽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다.

- <보기>부터 확실하게 정리해봅시다. ㉡이 '따뜻한' 물을 이용하기 위한 '행동'을 의도하고 세면대로 간 상황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은 '빨간색'으로, 차가운 물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은 이때 '빨간색' 쪽지를 '초록색' 쪽지로 파악하겠네요. '기능론'에 따르면 ㉡은 이로부터 빨간색 쪽지를 '생동감 있는' 색으로 인식하는 '현상적 경험'을 하고, 결국 따뜻한 물이 나오는 쪽지가 없다는 생각에 아무런 쪽지도 들지 않는 '행동=기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기>에서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에 대한 감각질은 뒤집히지 않았기 때문에, '파란색'에 대해서는 '차가움'이라는 색 경험 공간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해놓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이 성공한다는 측은 ㉡에게는 빨간색 쪽지가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빨강과 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혔으니 당연하지.
해설	㉠이 성공한다는 측은 ㉡의 '감각질'이 뒤집혔다는 것을 가정할 것입니다. ㉡은 '빨강'과 '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혔기 때문에, '빨간색' 쪽지를 '초록색' 쪽지로 지각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이 성공한다는 측은 ㉡이 빨간색 쪽지를 보고 "이게 빨간 색이구나."라고 말한다고 설명하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능적인 측면은 똑같다고 하지.
해설	㉠이 성공한다는 측은 ㉡의 '감각질'이 뒤집혔을 뿐, '행동과 말'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성공한다는 측, 즉 '이원론'의 주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③ ㉠이 실패한다는 측은 ㉡이 빨간색 쪽지를 보고 따뜻함을 지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명시적 근거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따뜻함이 아니라 생동감을 지각하겠지.
해설	'빨간색' 쪽지를 보고 '따뜻함'이 아닌 '생동감'을 지각할 것이라는 점,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색 경험 공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선지였네요.

④ ㉠이 성공한다는 측과 실패한다는 측 모두 ㉡이 빨간색 쪽지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

명시적 근거	2문단 6번 문장, 3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원론에서는 틀다고 하겠지.
해설	㉠이 성공한다는 측, 즉 '이원론'의 입장에 따르면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지각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기능=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원론'에서는 ㉡이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쪽지를 틀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정답으로 고를 수 있네요.  한편 ㉠이 실패한다는 측, 즉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이 빨간색 쪽지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이지요?

⑤ ㉠이 성공한다는 측과 실패한다는 측 모두 ㉡이 빨간색 쪽지와 파란색 쪽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빨간색과 파란색의 감각질은 뒤집히지 않았지.
해설	㉡은 '빨강'과 '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힌 것이지, '파랑'과 관련된 감각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빨간색' 쪽지와 '파란색' 쪽지는 잘 구별하겠죠. <보기>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읽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길 바라요.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생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지문이었지만, '기능론'의 정의를 바탕으로 재진술시키고, 사례를 원리와 적절하게 연결시키며 읽었다면 정보량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친절'한 지문을 '친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정리해야겠죠?

**3주차 <기출 유사 지문 - 법률의 해석>**

2019LEET [28~30] 사회(법) '근대법의 기획' ☆☆☆☆

**1문단**

①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②이러한 근대법의 기획에서 법은 그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야 한다. ③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와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④이에 따라 형사법 분야에서는 형벌 범규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하고, 법문의 의미하는 한계를 넘어선 해석을 금지한다. ⑤법치국가라는 헌법 이념에서도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리가 정립되었다. ⑥여기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법문이 절대적으로 명확한 상태여야만 한다는 것까지 뜻하지는 않는다. ⑦입법 당시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언제든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을 띠 수밖에 없는 탓이다. ⑧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이란 일정한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①~③ #화제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면 법관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제약이 분명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나아가 '프랑스 혁명 이후'라는 말을 보고서 '프랑스 혁명 전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만연했구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생각을 '근대법의 기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개념의 정의를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법률을 명확히 기술해야 하는 것' 정도로 정리하고 갈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근대법의 기획'에서, 법은 국민 개개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3번 문장에 제시되어 있죠? 국민이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와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역시 당연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기술된 '법률'을 국민 개개인이 모두 이해한 상태여야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근대법의 기획'은 현대의 법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실증주의'와 같은 개념으로도 확장되는데, 이에 대해 다루는 기출문제도 있었고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배경지식화하도록 합시다.

**④ #재진술**

이러한 내용을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인 '형사법' 분야로 좁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벌 범규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하며, '법문의 의미하는 한계를 넘어선 해석'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의 재진술이기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문이 의미하는 한계를 넘어선 해석'이 금지된다는 것도 '유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해석 금지의 원칙'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법률'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국민들은 그 내용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에 적힌 것 이상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 '근대법의 기획'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번 문장에서 이야기한 '법관의 자의적 해석'과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⑤~⑦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번엔 '헌법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근대법의 기획' 정신이 적용되었다고 해요.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죠?

그런데 6번 문장에서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 명확'이라는 것이 '법문이 절대적으로 명확한 상태'와 같은 말은 아니라고 해요. 아니 앞에서는 계속 '법문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놓고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7번 문장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률이 '일반적·추상적'인 형식을 띠다고 해요.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써 두면 '법문이 의미하는 한계를 넘어선 해석'이 금지된다는 원칙에 따라 미래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애매하고 추상적이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법문이 절대적으로 명확한 상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⑧ #재진술 #화제 제시**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명확성'은 일정한 '해석'을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지문의 진짜 화제가 나온 모양새네요. 이 지문은 '근대법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해석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지문일 것입니다.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⑧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이란 일정한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해석의 필요성'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해석까지 허용되는 것이지?'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궁극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독해력이예요. 화제가 무엇인지 체크해야 한다는 태도가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생각입니다.

**2문단**

①일반적으로 해석을 통하여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 참조하기도 한다. ②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법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③우선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④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것을 법의 전문가가 아닌 어느 국민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⑤법률의 명확성이 말하고 있는 바는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국민의 이해 수준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구체화한 만큼 실제로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⑥나아가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한 해석은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종종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활용되며 납용의 위협에 놓이기도 한다.

**①~② #화제의 흐름 #카테고리 나누기**

이렇게 '해석'을 통해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할 때,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 참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개념이 제시되었으니 카테고리를 나눠주시고, 당연한 말로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문을 해석할 때 그 법이 어떤 의도·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참고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러한 해석 방법은 우리가 당연하게 납득했듯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판들이 있을까요?

**③~⑥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먼저 '입법자의 의사',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나는 비판이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법문이 추상적이기 때문이었는데, 이를 위해 참조하는 것들도 추상적이려면 '근대법의 기획'을 제대로 실현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여느 국민에게 그러한 수준의 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번 문장에서 재진술하고 있듯이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작업, 즉 '해석'은 국민의 이해 수준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많은 국민들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사',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고려하며 법문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법 집행을 하겠다는 '근대법의 기획'이 가진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이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근대법의 기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꼭 피해야 하는 것인데, '해석'이라는 행위가 개입되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비판의 내용을 각각 카테고리화시켜두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지문이 '근대법의 기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세 가지 비판을 뒤집을 논리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때 이 문단의 내용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놓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법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비판'을 보고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시될 것이니 카테고리화해야겠다는 점, 그리고 그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문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틀렸다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생각'하며 '능동적인 독해'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3문단**

①한편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을 이미 주어져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아니라,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②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규율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법률의 규율 내용이 실제로는 법관의 해석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국민이 행위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이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정과 그 적용은 각각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영역이라는 권력 분립 원칙 또한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①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지금까지 제시된 비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다른 비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주어져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의 재진술입니다. '입법자의 의사·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미 주어진 법률을 '인식'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보는 관점이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을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 시각은 '근대법의 기획'이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앞부분의 내용을 재진술하는 것이네요. 이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대법의 기획'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놓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 #재진술**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내용 자체는 가볍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의 규율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법률을 법관이 '해석'해야만 그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은 너무나 불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이를 국민이 미리 알고 행동 지침으로 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문단에서는 법의 해석을 스스로 할 만한 능력을 갖춘 국민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가능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는 뜻), 여기서는 애초에 국민이 행위 전부터 법관의 '의미 구성'까지 예측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이는 '근대법의 기획'에서 '해석'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화제의 흐름**

여기에 '권력 분립 원칙' 또한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 모습 이네요. 확실하게 구분해줄 수 있겠죠?

나아가 이때 '법률의 제정=입법기관의 영역', '법률의 적용=사법기관의 영역'이라는 점은 당연한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행정입법' 지문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는 '사법기관'에 속하는 '법관'이 '입법기관'의 역할인 '법 제정'을 하는 것처럼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문제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석'을 '의미 구성'으로 보는 순간 '근대법의 기획'은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겠다는 '근대법의 기획'의 대전제도 깨지게 되는 것이구요.

이렇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근대법의 기획'은 허점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근대법의 기획'을 공격하는 식으로 지문이 마무리되거나, 이러한 비판에 '근대법의 기획'이 대응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죠? 계속해서 '능동적인 생각'으로 지문의 흐름을 만들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한편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을 이미 주어져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아니라,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미 주어져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앞문단까지의 내용을 재진술한 것임을, 그리고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이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을 재진술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자의 입장에서 '근대법의 기획'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점까지 생각해야 하겠군요.

나아가, 3번 문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활동'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에서 반복되는 수준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문 이해가 훨씬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4문단**

①그렇다면 근대법의 기획은 그 자체가 허구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되어야 하는가? ②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③첫째, 법의 해석이 의미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통찰로부터 곧바로 그와 같은 구성적 활동이 해석자의 자의와 주관적 판단에 완전히 맡겨져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④단어의 의미는 곧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의 언어 사용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며, 따라서 언어 사용 그 자체가 사회적 규칙에 의해 지도된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법의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적 규칙들 또한 해석자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⑤둘째, 해석의 한계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은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관과 같은 전문가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감축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⑥다시 말해서 법률이 다소 모호하게 제정되어 평균적인 일반인이 직접 그 의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② #화제의 흐름**

이렇게 여러 문제를 가진 '근대법의 기획'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상한 것처럼 '근대법의 기획'에 제기된 여러 비판들에 대응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일단 '법률의 해석'이라는 행위에 대해 어떤 비판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법자의 의사·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과 같은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결국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추상적'인 법 '해석'을 일반 국민이 행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이는 '법문의 한계를 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어서는 방편'이 되기도 하여, 법관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면 아예 국민의 법적 행위에 대한 예상이 불가능해지고 '권력 분립 원칙'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근대법의 기획'에서는 이러한 비판들에 대응해야 합니다. 1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해석'이라는 행위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석'을 허용하면서도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③~④ #재진술**

먼저 '법의 해석이 의미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통찰', 즉 3문단의 비판으로부터 곧바로 '해석자의 자의·주관적 판단'을 끌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니 4번 문장의 내용과 엮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4번 문장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는 곧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확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어의 의미'는 '법문의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법의 해석'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죠? 즉,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법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맞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의 '언어 사용', 즉 '법의 해석'과 같은 행위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언어 사용'이 '사회적 규칙'에 의해 지도되는 것처럼, 즉 '집단적'인 것처럼 '법의 해석'과 관련한 내용들도 해석자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법의 해석'이라는 것도 '언어 사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적 규칙'에 의해서 그 해석이 어느 정도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긴 문장이었지만, 이해하고 나니 결국 핵심은 '법관의 자의적 해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로부터 파생된 다른 비판들, 즉 해석이라는 과정이 '추상적'이라는 비판과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 등에 대응할 수 있겠네요.

**⑤~⑥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하나의 대답으로 여러 비판에 대응하기는 했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러한 해석을 고려하면서 법률에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5번 문장에서는 이에 대답하고 있네요. '비판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에 따르면, '해석의 한계', '법률의 명확성 원칙' 같은 것은 '전문가'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즉, 어느 정도 제한된 '해석'을 바탕으로 '법률'을 명확하게 만들고 해석하는 것은 법관과 같은 '전문가'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6번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균적인 일반인이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관이 해석을 도와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초에 국민들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2~3문단에 제시된 비판도 무의미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국민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그렇다면 근대법의 기획은 그 자체가 허구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포기되어야 하는가?

앞 문단에서 했던 예측들 중 '근대법의 기획의 비판에 대한 대응'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 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고서 이러한 흐름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에서 제시되었던 비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여유까지 부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문단**

[A] ①다만 이와 같은 대답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②국민 각자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념은 사실 '일반인'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의 도입을 통해 한 차례 타협을 겪은 것이었다. ③그런데 '전문가'라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재차 줄이면 근대법의 기획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①~③ #화제의 흐름 #정의 제시 #이면의 내용 추론하기 #재진술**

이렇게 '근대법의 기획'에서 비판에 잘 대응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문일까요?

'국민 각자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념', 즉 '근대법의 기획' 자체는 '일반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한 차례 타협'을 겪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타협'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국민 각자가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근대법은 기획'은 '일반인'이 이해할 정도면 된다고 '타협'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어느 정도 법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인이 아닌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의 정의를 추론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문단에 따르면, '근대법의 기획'은 '전문가'라는 기준까지 도입해버린 모습입니다. '국민 각자'에서 '일반인'으로 이미 타협한 상태인데, 여기서 '전문가'로 한 번 더 타협해버리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입법자의 부담이 '재차' 줄어드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재차'라는 말의 의미에 주목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즉, '국민 각자→일반인→전문가'의 흐름에서 '입법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똑똑한 사람 정도가 되면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보다는 법의 전문가들만이 이해하면 될 정도로 만드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문장 이면의 내용을 추론해내는 것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장이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입법자의 부담'을 계속 줄여버리면 애초에 '국민 개개인'이 법을 이해하게 한다는, '근대법의 기획'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근대법의 기획'은 애초에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써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고 국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어.

**\*하이라이트 문장\***

③그런데 '전문가'라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재차 줄이면 근대법의 기획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2번 문장과 엮어서, '국민 각자→일반인→전문가'라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타협', '입법자의 부담 줄이기'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굉장히 어렵지만 최근 평가원이 즐겨 사용하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익히도록 합시다.

**28. [근대법의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근대법의 기획'이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봅시다.

① 사법 권력으로 입법 권력의 통제를 피하였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권력끼리 통제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해설	'근대법의 기획'은 '해석'을 배제하지 않기에, '사법 권력'과 '입법 권력'의 분립 원칙을 어길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법 권력'이 '입법 권력'의 역할을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통제'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지문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지네요.

② 금지된 행위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을 형사 처벌의 기본 근거로 삼는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을 명확하게 해서 국민이 이해하게 하고 그로부터 행위를 평가하는 게 핵심이지.
해설	이 지문의 화제와 맞닿아 있는 선지입니다. '근대법의 기획'에서는 국민 각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법을 근거로 국민의 행위를 평가하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즉, 법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 행위가 금지되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 행위를 했다는 건 처벌을 받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③ 법관의 해석 없이도 잘 작동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했던 기획은 마침내 성공하였다.

명시적 근거	1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해설	‘근대법의 기획’에서는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었죠. 애초에 ‘법관의 해석 없이도 잘 작동하는 법률’을 기획한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네요.

④ 이해 가능성이 없는 법률에 대한 해석의 부담을 법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석의 부담은 법관에게 전가했지.
해설	일단 선지 자체가 지문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지기도 했지만, ‘해석의 부담’은 법관과 같은 ‘전문가’에게 지우면 된다는 것이 ‘근대법의 기획’에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이야기한 내용이었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해석’의 부담은 ‘법관’에게 전가하면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⑤ 자의적 해석 가능성만 없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률로도 국민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국민이 이해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지.
해설	국민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근대법의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였습니다.

**\*FAQ\***

Q : 근대법의 기획 쪽에서는 전문가에게 부담을 넘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A :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법관과 같은 전문가에게 법의 ‘해석’에 대한 부담을 넘긴다고 했을 뿐, 법의 ‘이해’가 국민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법의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할 수 있다면, 어차피 사회적인 언어 규칙 내에서 이루어질 법관의 ‘해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근대법의 기획’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이해’와 ‘해석’처럼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단어들의 뉘앙스를 정확히 살려주는 독해 태도를 갖춰주도록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을 비판할 때, 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리

- ‘근대법의 기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자,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원리를 비판하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 일치 문제로 봐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전문가인 법관에 의해 법문의 의미가 구성되지 않으면 자의적 법문 해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법관이 법문의 의미를 구성하는 건 자의적 해석 그 자체라고 봐야지.
해설	㉠에 대한 비판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지입니다. ㉠은 법관의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인데, 지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법문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자의적 법문 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문의 의미를 구성하지 않아야 비로소 자의적 법문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네요.

②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야 비로소 법의 의미가 구성될 경우에는 권력 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③ 법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한 법문 해석은 법문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④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야 비로소 법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하면 법을 국민의 행동 지침으로 삼기 어렵다.

⑤ 국민이 입법자의 의사까지 일일이 확인하여 법문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명시적 근거	2문단~3문단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문에 있는 말 그대로네.
해설	2문단과 3문단에서 제시되었던 ‘근대법의 기획’에 대한 비판’ 카테고리 속 정보들이 그대로 선지화된 모습입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30.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㉓

- '국민 각자→일반인→전문가'의 흐름에서 '타협'과 '입법자의 부담 줄이기'라는 내용을 추론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해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① 가장 이상적인 법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일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장 이상적인 법은 국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
해설	'일반인'이라는 기준은 '국민 각자'라는 기준에서 한 차례 '타협'을 겪은 것일 뿐, 가장 이상적인 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의미하는 바가 '어느 정도 법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읽어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②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문가 기준 도입하는 게 안 좋다는 거잖아.
해설	[A]의 핵심은 '전문가'라는 기준을 도입하면 '근대 법의 기획'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네요.

③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입법은 국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입법보다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국민 각자→일반인'으로 가면서 '입법자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 지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추론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차'와 같은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입법 과정에서 일상적인 의미와는 다른 법률 전문 용어의 도입을 확대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헛소리야.
해설	법률 전문 용어의 도입이 확대되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더 적어지게 됩니다. [A]는 이렇게 법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타협'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이와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선지네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를 행위 당시에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법관은 입법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A]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네.
해설	[A]는 '전문가'라는 기준의 도입에 대한 비판이지, 법관의 해석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선지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③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이면의 내용 추론하기 등 중요한 독해 태도는 물론 '근대법의 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에 좋았던 지문이었습니다. 이는 어제 배운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독해 태도와 지식들 모두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3주차 <과학 제재의 지문 읽기>**

2021LEET [25~27] 과학 '바르부르크 효과' ☆☆☆☆☆

**1문단**

① 암세포의 대사 과정은 정상 세포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오토 바르부르크가 발표한 '바르부르크 효과'에 따르면 암 세포는 '해당작용'을 주된 에너지 획득 기전으로 수행하고 또 다른 에너지 획득 방법인 '산화적 인산화'는 억제한다.

**①~② #화제 제시 #정의 제시**

'암세포의 대사 과정'이라는 화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 세포와는 다른데, '바르부르크 효과'라는 것에 따르면 암세포는 '해당작용'을 주된 에너지 획득 기전으로 수행하고, '산화적 인산화'는 억제한다고 합니다.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이 정보를 '암세포의 대사 과정'이라는 화제와 연결시킬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2문단**

① 세포는 영양분으로 섭취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을 통해 ATP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② 또한 ATP와 같은 고에너지 분자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위해 작은 분자로부터 단백질, 핵산과 같은 거대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③ 이화작용을 통해 ATP를 생산하기 위해 세포는 영양 물질을 내부로 수송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양 물질인 포도당은 세포 내부로 이동하여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작은 분자로 분해된다. ④ 이론적으로 포도당 1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ATP로 전환될 경우 36개 또는 38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⑤ 이 중 2개의 ATP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작용을 통해, 나머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①~② #수식된 정의 제시**

먼저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개념이니, 기억할 정도로 확실하게 체크해야겠죠? 먼저 '이화작용'은 영양분으로 섭취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 'ATP'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큰 분자'→'작은 분자'라는 방향성, 'ATP 생성'이라는 결과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줘야겠네요.

한편 '동화작용'은 'ATP'와 같은 고에너지 분자의 에너지를 통해, '작은 분자'로부터 '거대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거대 분자'는 세포의 성장·분열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화작용'과 달리 '작은 분자'→'큰 분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포의 성장·분열'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가 꽤 많기는 하지만, 초반부에 쏟아지는 정보이니 시간을 충분히 써서라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지문 후반부를 독해할 때 분명히 큰 도움을 줄 테니까요.

**③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화작용'을 통해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체크한 '이화작용'의 정의는 영양분으로 섭취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것입니다. '영양

상향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분'으로 섭취했다는 말을 바탕으로, 포도당이 '영양 물질'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해요. 이는 세포 내부로 이동하여 '해당작용' 및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작은 분자'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포도당'이 '큰 분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화작용'을 '큰 분자'→'작은 분자'로 정의했는데, '포도당'→'작은 분자'라는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니 '큰 분자=포도당'으로 재진술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로 써 먹기 좋은 부분이니 확실하게 체크해야겠죠?

나아가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라는, 이 지문의 주인공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는 모두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걸 잡아내야 해요. 암세포는 '이화작용'을 할 때 '해당작용'을 주로 수행하고 '산화적 인산화'를 억제하는 것이예요! '동화작용'을 정의할 때 '이화작용'의 결과인 'ATP'가 '고에너지 분자'라고 했는데, 이로부터 1문단에서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를 '에너지 획득 방법'이라고 설명한 이유를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ATP'라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화제의 흐름이 확실하게 잡히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모든 문장은 유기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④~⑤ #재진술 #비교/대조 #화제의 흐름**

이렇게 '포도당'의 에너지를 '이화작용'을 통해 'ATP'로 전환할 경우, 36개 또는 38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에서 언급된 숫자는 선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중 2개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작용'을 통해, 나머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의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건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아가 '산화적 인산화'가 훨씬 더 효율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당작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ATP=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암세포'는 더 비효율적인 '해당작용'에 몰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암세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흐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 이화작용을 통해 ATP를 생산하기 위해 세포는 영양 물질을 내부로 수송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양 물질인 포도당은 세포 내부로 이동하여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작은 분자로 분해된다.

'영양 물질'을 보고서 '이화작용'의 정의를 다시 끌고 와 '포도당=큰 분자'의 재진술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해당작용, 산화적 인산화=이화작용'이라는 것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량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문장이지만, 아무 생각없이 읽으면 그저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3문단 (1)**

①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는 수행되는 장소도 다르지만 요구 조건도 다르다. ② 해당작용에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산화적 인산화에는 필수적이다. ③ 세포 내부에 산소가 부족하면

산화적 인산화는 일어나지 못하고 해당작용만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바뀌는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④심폐 기능에 비해 **과격한 운동**을 하였을 때 근육 세포에서 생성된 젖산이 근육에 축적된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비교/대조**

이러한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는 '수행되는 장소'뿐 아니라 '요구 조건'도 다르다고 합니다. 카테고리가 나뉘는 느낌이 들어야겠죠? '세포질/미토콘드리아'라는 '수행되는 장소'도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어떤 점이 다른가 했더니, '산소의 필요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화적 인산화'와 달리 '해당작용'에서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이러한 '요구 조건'에서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로 계속 읽어 봅시다.

**③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러한 '요구 조건'에서의 차이로 인해, '산소'가 부족한 세포는 '해당작용'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해당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바뀐다고 해요. '젖산'으로 '발효'되는 것이기에 '젖산/발효'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산소가 없는 경우'에 대해 읽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계속 가봅시다. 지문의 정보만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더욱 속도를 늦춰야겠죠?

**④ #재진술**

갑자기 뜬금없이 '과격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젖산'이 근육에 축적된다고 해요. 우리는 앞 문장에서 '젖산'이 '산소가 없는 경우'에 생기는 것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과격한 운동=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결국 '젖산'은 '산소가 없는 경우'에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문장이었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는 수행되는 장소도 다르지만 요구 조건도 다르다.

'요구 조건'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정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생각하며 정보를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문단 (2)**

⑤젖산 발효 과정은 해당작용에 필요한 조효소 NAD<sup>+</sup>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⑥NAD<sup>+</sup>로부터 해당작용의 또 다른 생성물인 조효소 NADH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⑦해당작용에서 포도당 1개가 2개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될 때 NADH가 2개 만들어지고, NADH 1개당 3개의 ATP를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만들 수 있는데, 젖산 발효를 하는 세포는 NADH를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NAD<sup>+</sup>로 전환하는 손해를 감수한다.

**⑤~⑥ #재진술**

이러한 '젖산 발효 과정'은 '조효소 NAD<sup>+</sup>'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조효소 NAD<sup>+</sup>'는 '해당작용'에 필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젖산 발효 과정'은 '해당작용'만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를 거치면 '해당작용'의 재료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해당작용 → 젖산 발효 → 해당작용 → 젖산 발효 → ...'의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NAD<sup>+</sup>'는 '해당작용'의 또 다른 생성물인 'NADH'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때문이다'라는 재진술의 표지를 보고, 5번 문장과 6번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젖산 발효 과정'은 '산소'가 없어 '해당작용'만 진행될 때 일어나는데, '산화적 인산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당작용'만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재료인 'NAD<sup>+</sup>'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NAD<sup>+</sup>'는 'NADH'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으니, 'NADH'가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NAD<sup>+</sup>'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NADH'가 필요하다는 것이니까요.

**⑦ #재진술**

'해당작용'을 통해 '포도당=큰 분자' 1개를 2개의 피루브산으로 '분해'한다고 합니다. '큰 분자 → 작은 분자'라는 방향성에 따라, 이때의 '피루브산'이 바로 '작은 분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과정에 'NADH'가 2개 만들어진다고 해요. 'NADH'라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으니 앞 문장에서 끌고 와 이해하면, 이는 'NAD<sup>+</sup>'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NADH' 1개당 3개의 'ATP'를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합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분명 '산소'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왜 '산화적 인산화'가 나온 것인지 궁금해하며 조금 더 읽어보니, '있는데'라는 어미가 보입니다. 즉, 원래 '산화적 인산화'까지 하면 'NADH' 1개당 3개의 'ATP'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산화적 인산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NADH'를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NAD<sup>+</sup>'로 전환하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젖산 발효'를 하는 경우 'NADH'를 'NAD<sup>+</sup>'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NADH'는 '산화적 인산화'를 이용하면 원래 'ATP'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차라리 다시 'NAD<sup>+</sup>'로 바꿔 '해당작용'을 한 번 더 한다는 것이죠. 'NAD<sup>+</sup>'는 '해당작용'의 재료였으니까요. 비록 '해당작용'은 '산화적 인산화'보다는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ATP=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소가 없는 상황=해당작용만 일어나는 상황=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젖산 발효 과정'이라는 전체 속에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는 걸 바탕으로, 'NAD<sup>+</sup>'와 'NADH'의 정의·역할을 정확하게 체크하며 차분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모든 문장이 유기적으로 엮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전개하는 것이었어요. 어렵더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4문단**

①바르부르크 효과는 산소가 있어도 해당작용을 산화적 인산화에 비해 선호하는 암세포 특이적 대사 과정인 '유산소 해당작용'을 뜻한다. ②암세포가 더 빨리 분열하는 악성 암세포로 변하면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해당작용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다. ③약물 처리 등으로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해당작용에 대한 의존이 줄고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다

다. ④유산소 해당작용을 수행하는 암세포는 포도당 1개당 ATP 2개만을 생산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해당작용에 에너지 생산을 대부분 의존하므로 정상 세포에 비해 포도당을 더 많이 세포 내부로 수송하고 젖산을 생산한다.

**①~③ #화제의 흐름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지금까지 '바르부르크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부르크 효과'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원래 '산소'가 있으면 효율적인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에너지를 얻으면 되는데, 암세포는 특이하게 '산소'가 '있어도' '해당작용'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유/산소/해당작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확 살겠죠?

이렇게 '암세포'가 악성으로 변하면 '해당작용'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는데, 약물 등을 사용하면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2~3번 문장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초반부의 정보들을 활용하며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④ #재진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암세포'는 비효율적인 '해당작용'에 에너지 생산을 의존하고, 이에 더 많은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수송하게 됩니다. '포도당'은 '영양 물질'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 암세포 혼자서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아가 이렇게 '해당작용'만 진행되면, '젖산 발효'가 일어나며 더 많은 젖산이 생성되겠죠? 역시 초반부의 정보를 끌고 오며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바르부르크 효과는 산소가 있어도 해당작용을 산화적 인산화에 비해 선호하는 암세포 특이적 대사 과정인 '유산소 해당작용'을 뜻한다.

이 지문의 화제는 '바르부르크 효과'였습니다. 초반부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 내용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소가 있는데도 굳이 '해당작용'을 선호하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고, '바르부르크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5문단 (1)**

①바르부르크 효과의 원인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설명이 있다. ②첫 번째는 암세포의 빠른 성장 때문에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거대 분자를 동화작용을 통해 만들기 위해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 물질을 동화작용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해당작용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③두 번째는 체내에서 암세포의 분열로 암 조직의 부피가 커져서 산소가 그 내부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④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암세포가 억제하여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의 실행을 방해함으로써 스스로의 사멸을 막으려 한다는 이론이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그렇다면 도대체 암세포는 왜 이런 '유산소 해당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이 원인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해당작용의 원인'이라는 카테고리 잡아두고, 하나씩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④ #재진술**

첫 번째는 '동화작용'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작용'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동화작용'을 보자마자 2문단으로 올라가 그 정의를 끌고 내려와야겠죠? 이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위해 '작은 분자→거대 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동화작용'에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 물질'을 재료로 이용하기 위해 '해당작용'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 물질'은 무엇일까요? 일단 '동화작용'의 정의에 따르면, 이 과정은 'ATP'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작용의 최종 산물'은 '피루브산'이라고 했어요. 결국 '동화작용'에 사용하는 재료이며, '해당작용'의 '최종 산물'은 아닌 'ATP'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빠르게 'ATP'를 얻고, 이를 암세포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당작용'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 봤던 말들이 나오면 끌고 내려오며 재진술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납득'이 가능해지는 것이예요.

두 번째는 암세포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암 조직의 부피가 커지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산소가 없는 환경'의 상황을 연습한다는 것이죠.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면 '해당작용'만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이것이 실행되면 암세포에게 치명적이지 그 역할을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이죠. 이때 '미토콘드리아'를 보자마자 '산화적 인산화'를 떠올릴 수 있겠죠?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억제되면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바르부르크 효과'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겠습니다.

초반부의 정보를 알뜰하게 활용했더니, 어려운 내용들이 모두 깔끔하게 납득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첫 번째는 암세포의 빠른 성장 때문에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거대 분자를 동화작용을 통해 만들기 위해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 물질을 동화작용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해당작용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동화작용'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2문단의 정보를 끌고 내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5문단 (2)**

⑤바르부르크는 이러한 암세포 특이적 대사과정의 변이를 발암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⑥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와 암 억제 유전자에 생기는 돌연변이가 주된 발암 원인이고, 바르부르크 효과는 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돌연변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⑤~⑥ #화제의 흐름**

'바르부르크'는 이러한 세 가지 원인을 '발암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그저 '결과'일 뿐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싱겁게 끝나는 모습이네요,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 ① 해당작용의 산물 중 NADH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3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NADH를 산화적 인산화에서 사용하면 ATP를 만들지.
해설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적 인산화'가 수행되는 장소였습니다. '해당작용'의 산물 중 'NADH'는 이러한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ATP'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했어요. 다만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칠 수 없으니 '해당작용'을 하기 위해 'NAD'로 바뀌는 것이었구요. 지문의 핵심 정보를 확실하게 납득할 것을 요구한 선지네요.

- ② 해당과정 중 소비되는 NADH의 재생산은 해당작용의 지속적 수행에 필수적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NAD <sup>+</sup> 를 재생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NADH를 만드는 것이고.
해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낚이기 쉬운 선지입니다. 'NAD <sup>+</sup> '와 'NADH'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했어요.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작용'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당작용'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NAD <sup>+</sup> '였어요. 이를 재생산하여 '해당작용'의 산물인 'NADH'를 만들고, 이를 다시 'NAD <sup>+</sup> '로 변화시켜 계속 '해당작용'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NADH'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네요.  나아가, 애초에 'NADH'는 해당과정 중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워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지우든, '해당작용'의 과정을 완벽하게 납득하는 것을 요구한 어려운 선지입니다.

- ③ 심폐 기능에 비해 과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젖산은 늘어나고 NAD<sup>+</sup>는 줄어든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운동 많이 하면 젖산이 늘고, 젖산 발효 과정은 NAD <sup>+</sup> 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었지.
해설	심폐 기능에 비해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 해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육 세포에서 '젖산'이 많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젖산 발효' 과정은 'NAD <sup>+</sup> '를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젖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NAD <sup>+</sup> '도 늘어난다고 해야 맞겠네요.

- ④ 동화작용에서 거대 분자를 만들 때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물이 사용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었지.
해설	'바르부르크 효과=유산소 해당작용'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는 선지네요. 가볍게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면, 이때의 '중간 생성물'이 'ATP'를 의미한다는 것을 물어봤겠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해요!

- ⑤ 바르부르크 효과에 의해 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유발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바르부르크 효과는 그냥 결과라며.
해설	최근의 연구 결과, 발암의 원인은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 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바르부르크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인과 관계를 뒤집은 간단한 선지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있는 정보였기에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26. 윗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상실되면 NADH로부터 ATP를 만들지 못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3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상실되면 산화적 인산화를 못 하지.
해설	앞 문제의 1번 선지와 사실상 똑같은 선지죠? 'NADH'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ATP'를 생성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정보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 있어야 해요.

- ② 유산소 해당작용을 수행하는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히 존재할 때에도 해당과정의 산물을 NAD<sup>+</sup>와 젖산으로 전환시킨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5번 문장,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산소 해당작용 수행하면 산소가 있어도 해당작용에 더 의존하지.
해설	'유산소 해당작용'을 수행하는 암세포는 '산소가 있어도 '해당작용'에 더 의존합니다. 이는 '산화적 인산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당작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당과정의 산물인 '피루브산'을 '젖산'으로 바꾸고, 이로부터 'NAD <sup>+</sup> '를 생산할 것입니다. 애초에 'NAD <sup>+</sup> '와 '젖'

	산'으로 전환시킨다는 말 자체가 '해당작용'에 의존한다는 것과 같은 말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	--

③ 포도당 1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ATP로 전환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34개 또는 36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당작용으로는 2개만 만든다고 했으니까 맞지.
해설	지문에 제시된 숫자는 선지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포도당 1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ATP로 전환되면 36개 또는 38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해당작용'을 통해서는 2개를 만든다고 했으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는 34개 또는 36개를 만들겠네요. 간단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④ 포도당 1개가 피루브산 2개로 분해되었고 이때 생성된 조효소의 에너지도 모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전환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생성된 ATP는 모두 8개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3문단 7번 문장,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설과 동일
해설	선지에서 묻는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포도당 1개가 '피루브산' 2개로 분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루브산'은 해당작용의 '최종 산물'이었어요. '최종'이라는 말에 따라, '피루브산'은 '해당작용'이 'ATP'를 만든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당 1개가 '피루브산' 2개로 분해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ATP'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문단에서 '해당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ATP'는 총 2개라고 했으니, 이 과정에서 2개의 'ATP'가 생성된 것이죠.  다음으로 이때 생성된 '조효소'의 에너지가 모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피루브산'으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조효소'는 'NADH'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 'NADH' 1개당 3개의 'ATP'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루브산'으로 분해될 때 'NADH'는 2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므로, 이 과정에서 총 6개의 'ATP'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과정을 거쳐 2개, 6개의 'ATP'를 만들었기에, 최종적으로 8개의 'ATP'가 생성되네요. 맞는 선지였습니다.  '바르부르크 효과'의 원인 중 첫 번째 원인을 납득하는 과정에서,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 물질'이 'ATP'라는 것을 미리 체크했다면 훨씬 쉽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NADH' 1개당 3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는 것만 생각해 6

	개의 'ATP'가 생성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초반부에 체크한 정보를 끌고 오며 뒷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의 독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도록 합시다.
--	---

⑤ 암세포의 유산소 해당작용 과정 중 포도당 1개당 생산되는 ATP의 개수는 정상세포의 산소가 있을 때 수행되는 해당작용의 과정 중 포도당 1개당 생산되는 NADH의 개수보다 많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3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당작용으로 2개의 ATP를 만들 수 있고, NADH도 2개 만들 수 있지.
해설	이번에도 선지에서 묻는 내용을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봅시다. 먼저 암세포의 '유산소 해당작용 과정'입니다. 이는 산소가 있는데도 굳이 '해당작용'만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해당작용'을 하는 경우, 포도당 1개당 2개의 ATP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정상세포입니다. '산소'가 있을 때 수행되는 '해당작용'의 경우, 포도당 1개당 2개의 피루브산과 2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 뒤 정상적으로 '산화적 인산화'를 거쳐 총 6개의 'ATP'를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선지에서 묻는 것은 'NADH'의 개수이므로, 2개가 만들어진다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전자의 개수와 후자의 개수가 모두 2개이므로, '많다'라고 하면 틀렸네요. 계속해서 3문단에 제시된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의 과정을 완벽하게 납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네요.

27.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암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는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를 이용하는 핵의학 검사법이다.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는 포도당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암 조직과 같은 포도당의 흡수가 많은 신체 부위에 수송되어 축적되므로 단층촬영을 통해 체내에서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분포를 추적할 수 있다.

-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라는 것을 사용하는 'PET'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가 '포도당의 흡수가 많은 신체 부위에 수송된다는 점이에요.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포도당의 흡수가 많다'는 말이 곧 '유산소 해당작용'을 하는 '암세포'임을 의미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작용'은 '산화적 인산화'에 비해 소량의 'ATP'만 만들 수 있기에, 지속적인 포도당의 공급이 필수적이니까요. 따라서 'PET'라는 기술은 '포도당의 흡수량'을 바탕으로 '암세포의 위치'를 찾는 것이네요. 이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①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는 양이 증가하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줄어들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는 건 젖산 발효인데, 이게 일어나면 포도당 많이 필요하지.
해설	'해당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이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 즉 '해당작용'만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보기>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포도당 흡수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②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전환되는 양이 감소하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늘어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당작용이 적게 일어나면 포도당 덜 필요하지.
해설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해당작용'입니다. 이 양이 감소했다는 것은 포도당을 더 적게 필요로 한다는 것이기에, '포도당 흡수량=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은 줄어들겠네요.

③ 세포 내부의 산소가 줄어들어도 동일한 양의 ATP를 생성하려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늘어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산소가 줄어들면 해당작용에 더 의존해야 하니 포도당 더 많이 필요하겠지.
해설	세포 내부의 '산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산화적 인산화'보다는 '해당작용'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작용'은 '산화적 인산화'에 비해 만들 수 있는 'ATP'의 양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생산하는 'ATP'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포도당의 흡수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는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지문의 내용과 엮어 <보기> 정리만 잘 해냈다면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④ ATP의 생성을 해당작용에 좀 더 의존하도록 대사 과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줄어들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당작용에 의존하면 포도당 더 많이 필요하지.
해설	다 똑같은 선지죠? '해당작용'에 'ATP'의 생성을 의존한다면 더 많은 포도당이 필요하고, 이는 '포도당 흡수량=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ATP의 생성을 산화적 인산화에 좀 더 의존하도록 대사 과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늘어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4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해당작용이 적게 일어나면 포도당 덜 필요하지.
해설	'ATP'의 생성을 '산화적 인산화'에 좀 더 의존하도록 한다면, '해당작용'에 의존할 때보다 더 적은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도 줄어들겠죠.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카테고리 나누기 : 지문의 흐름 및 설명 대상이 바뀌는 느낌이 들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각자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말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정보를 끌고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초반 정보 건지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건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 \*지문 내용 총정리\***
- 초반부의 정보를 건디며 정리한 뒤, 후반부의 정보를 납득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같은 말이 반복될 때 끌고 내려와 납득하는 태도를 연습하기에도 아주 좋은 지문이었어요.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훑어보도록 합시다.

**3주차 <경제 제재의 지문 읽기>**

2013LEET [7~9] 사회(경제) '최적통화지역' ☆☆☆☆

**1문단**

①최적통화지역은 단일 통화가 통용되거나 여러 통화들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최적의 지리적인 영역을 지칭한다. ②여기서 최적이란 대내외 균형이라는 거시 경제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데, **대내 균형**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대외 균형**은 국제수지 균형을 의미한다.

**①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최적통화지역'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최적'의 '통화'가 사용되는 '지역'이네요. 단일한 통화가 통용되거나, 여러 통화들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최적'의 '통화'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나 봅니다. 첫 문단의 첫 문장부터 제시된 개념의 정의이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②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 제시**

'최적'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내외 균형'이라는 거시 경제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데, '대내 균형'은 물가 안정 및 완전 고용, '대외 균형'은 국제수지 균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대내'적인 '균형', '대외'적인 '균형'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나아가 앞 문장의 내용에 따르면, 단일 통화가 통용되거나 환율이 고정되는 경우 이러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이렇게 화제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최적통화지역은 단일 통화가 통용되거나 여러 통화들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최적의 지리적인 영역을 지칭한다.

첫 문단의 첫 문장부터 제시되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하고, '최적'이라는 개념이 은근슬쩍 정의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2문단**

①최적통화지역 개념은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발전하였다. ②**변동환율론자들은**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있는 국가에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반면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어떤 조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대내외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고려했다.

**①~② #화제의 흐름 #주장 제시**

이러한 '최적통화지역' 개념은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사이의 논쟁 속에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변동환율론자들은' '물가'와 관련된 가격과 '고용'과 관련된 임금의 경직성이 있는 국가, 즉 '대내 균형'의 변동이 쉽지 않은 국가에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J 커브 현상' 관련 지문,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관련 지문, 2022학년도 수능 '브레턴우즈 체제' 관련 지문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환율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의 변동은 국제수지(경상 수지)에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오르면 경상 수지 개선) 따라서 '대내 균형'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외 균형'인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환율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③ 비교/대조 #재진술**

반면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어떤 조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대내외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최적통화지역의 조건 중 하나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 즉 대내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상 1문단의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③반면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어떤 조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대내외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고려했다.

'최적통화지역 이론=고정환율 가정'이라는 1문단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은근슬쩍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1문단 내용을 떠올리면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3문단**

①초기 이론들은 최적통화지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준을 찾으려 하였다. ②**먼델**은 노동의 이동성을 제시했다. ③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한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 환율 변동의 필요성도 작을 것이다. ④**잉그램**은 금융시장 통합을 제시하였다. ⑤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으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본 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지역 내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⑥**한편 케넌**은 재정 통합에 주목하였다. ⑦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재정 지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⑧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고정환율 제도 아래에서도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최적통화지역'의 초기 이론들은 '최적통화지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준을 찾으려 했고, '먼델'은 '노동의 이동성'을 제시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을 가정하면, 실업률 회복(완전 고용)을 위해 평균적인 임금을 낮추는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임금 예산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줄어든 예산 속에서 완전 고용을 이루려면 임금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나라 간에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다른 나라로 노동을 이동하여 완전 고용을 이루면 되기 때문에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각국의 통화 가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 조정이 크지 않다=돈의 양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통화 가치에 큰 변동이 없다) 환율 변동의 필요성도 작을 거예요. 즉, 고정환율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잉그램은 '금융시장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다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본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자본이 쉽게 이동하면 자본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의 변동 압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고정환율 제도의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납득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⑥~⑧ #주장 제시 #재진술**

케넨은 '재정 통합'에 주목했습니다.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공유하며 재정이 통합된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재정 지출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서로의 통화 가치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기에 고정환율 제도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에요.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고정환율 제도 아래에서도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최적 통화 지역'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⑧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고정환율 제도 아래에서도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먼델', '잉그램', '케넨'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정보가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과정이 지문 독해의 완성이에요!

**4문단**

①이후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②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이 충족되며 단일 통화를 형성할 수 있다. ③단일 통화 사용의 편익은 화폐의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데 있다. ④거래 비용이 줄고, 환율 변동의 위험이 없어지며, 가격 비교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단일 화폐의 사용은 시장 통합에 따른 교환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⑤반면에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이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주요 비용으로 간주된다. ⑥단일 통화의 유지를 위해 대내 균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⑦이 비용은 <가격과 임금이 경직될수록, 전체 통화지역 중 일부 지역들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비대칭적 충격이 클수록 증가한다.> ⑧가령 한 국가에는 실업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한 국가는 확대 통화정책을, 다른 국가는 긴축 통화정책을 원하게 되는데, 양 국가가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의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⑨물론 여기서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⑩반대로 두 국가에 유사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택할 필요가 줄어들다. ⑪이 경우에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①~②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고정환율 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최적통화지역의 또 다른 조건인 '단일 통화 사용'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분석 결과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최적통화지역'의 조건

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겠죠. '고정환율 제도'→'단일 통화 사용'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③~④ #재진술**

'단일 통화 사용'의 편익은 화폐의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데 있습니다. 환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줄고, 환율 변동의 위험이 사라지는 이득이 있으며, 가격 비교가 쉽다는 이득이 발생하기에 화폐가 유용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시장 통합, 즉 단일 통화 사용으로 인해 교환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⑧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반면, '단일 통화 사용'으로 인해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이라는 비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 등 대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사용이 필요한데,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한 나라의 통화량 증가 등의 통화정책 결과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독립적인 통화정책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비용은 가격과 임금이 경직될수록, 지역들 사이의 비대칭적 충격이 클수록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국가에는 실업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단일 통화 사용'의 비용인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이 경우 실업이 발생한 국가에는 확대 통화정책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긴축 통화정책을 원하게 되는데,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의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이 발생한 국가의 확대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의 경기 과열을 일으키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기에 7번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격과 임금이 경직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실업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훨씬 절실해질 것입니다. 원래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가격과 임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경기와 고용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물가가 낮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임금이 낮아지면 고용이 늘어나는 당연한 원리) '가격과 임금이 경직'이 있는 상황이라면 '확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 절실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확대 통화정책을 쓰기 어렵고, 이에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이라는 비용이 정말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8번 문장의 사례처럼 '비대칭적 충격'이 큰 경우에도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이라는 비용은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에서 비대칭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례를 이용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⑨~⑩ #재진술 #화제의 흐름**

물론 여기서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에서 실업이 발생한 국가의 고용률을 높여 주는 것과 같은 일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할 것입니다. 앞에서 '먼델'의 주장을 이해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에 가볍게 납득할 수 있겠죠?

나아가 두 국가에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은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기에,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택할 필요가 줄어들어 독립적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비용이 감소하겠죠.

‘최적통화지역 이론’에서는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고정환율 제도 및 단일 통화 사용이 가능한 지역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시장 통합에 따른 교환의 이익이 증대되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이후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역시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편익’과 ‘비용’들이 ‘최적통화지역 결정’이라는 핵심적인 화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독해의 핵심이예요!

**5문단**

①최근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②유로 지역 내 노동 이동이 일국 내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로 지역은 최적통화지역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③더욱이 유로화 등장 이후 유로 지역 내에서 해외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유럽의 핵심국에서 유럽의 주변국으로 엄청난 자본 이동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주변국에는 경기 과열이 발생했다. ④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이동이 중단되자 주변국은 더 이상 호황을 지탱하지 못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⑤환율 조정 수단을 상실한 유로 지역은 핵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불균형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된 것이다.

**① #화제의 흐름 #사례-원리 연결**

최근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②~⑤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유로 지역은 ‘노동 이동’이 일국 내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최적통화지역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합니다. ‘노동 이동’이라는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일단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일 통화 사용’을 강행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의 등장 이후 유로 지역 내에서 해외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었고, 유럽의 핵심국에서 유럽의 주변국으로 엄청난 자본 이동이 발생하여 주변국에는 경기 과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변국과 중심국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주변국의 통화 가치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된 주변국에 자본이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이동이 중단되었고, 경기 과열 상태를 버티지 못한 주변국은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라는 ‘대내외 불균형’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주변국들은 ‘독립적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싶었을 텐데,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

상향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실’이라는 비용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어 ‘환율 조정 수단’을 상실한 유로 지역은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원래는 ‘환율 조정’을 통해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막혀 있다는 게 핵심인 것이죠.

결국 ‘유로 지역’은 이 지문에서 제시한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일 통화’를 사용한 것이고, 이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최근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유로 지역’이라는 사례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제시한 원리를 설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유로화=단일 통화’ 정도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6문단**

①더구나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은행 문제까지 부각되었다. ②은행 채무를 국가가 떠맡으면서 GDP 대비 공공 부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안이 가속되었으며 이는 다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은행의 신뢰까지 손상을 입혔다. ③이들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려 함에 따라 국채 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화제의 흐름**

더구나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은행 문제’까지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납득할 준비를 해야겠죠?

경기 과열로 인한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막대한 은행 채무를 국가가 떠맡으며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국가에 대한 신용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이에 국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안이 가속되었다고 해요. 결국 이렇게 불안한 국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은행의 신뢰까지 손상을 입게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은행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국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 매각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로 국채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되며, 결국 다시 국가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과정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가 방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이 지문은 마지막에 와서 ‘단일 통화 사용의 사례’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확대 통화정책’ 등의 사용이 필요한데, 유로 지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에 주변국의 독립적 통화정책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죠. 즉, 유로 지역은 단일 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훨씬 큰 지역이기에 ‘최적통화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 더구나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은행 문제까지 부각되었다.

문제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 '단일 통화 사용'임을 생각하며 '유로화와 같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7. 윗글에서 '최적통화지역 이론'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은 것은? ①**

- 지문을 제대로 납득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내용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요.

① 시장 통합으로 인한 편익의 계산 방식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계산하는 방식은 아예 나온 적이 없지.
해설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장 통합'을 이루면, 교환의 이익 증대 및 그에 따른 화폐의 유용성 증대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로 지역'과 같은 사례를 보면 한계가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문에서 다룬 적이 없죠? 정확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없으니 바로 정답이네요.

② 환율 변동을 배제한 경상수지 조정 방식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금융시장 통합!
해설	'인그렘'은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다면 고정환율 제도하에서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통해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을 배제한 경상수지 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인그렘'의 주장을 정확히 납득하지 못했다면 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납득하며 읽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③ 화폐의 유용성과 시장 통합 사이의 관계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은 사실상 같은 말이었지.
해설	화폐의 유용성 증대는 곧 시장 통합에 따른 교환의 이익 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통화 사용의 편익으로 제시된 내용이자, 우리가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었어오.

④ 단일 화폐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는 조건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두 개 있었지.
해설	단일 화폐 사용에 따른 비용은 '독립적 통화정책의 상실'이었습니다. 이는 가격과 임금이 경직될수록, 전체 통화지역 중 일부 지역들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비대칭적 충격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이었죠? 이 역시 확실하게 납득했어야 해요.

⑤ 독립적 통화정책 없이 대내 균형을 달성하는 조건

명시적 근거	4문단 9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4번 선지 내용이랑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해설	4번 선지 내용과 반대로,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낮거나 두 국가에 유사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독립적 통화정책' 없이도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이라는 '대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8. 윗글에 따를 때,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⑤**

㉠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

- '유로 지역'은 '최적통화지역'이 아닌 곳에서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단일 통화'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주변국의 임금을 인하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임금 인하가 되면 독립적 통화정책 없이도 실업을 극복할 수 있지.
해설	유로화와 같은 단일 통화 사용의 비용은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일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임금 조정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확대 통화정책의 사용이 필요한데,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독립적 통화정책의 상실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하니깐요. 결국 이러한 임금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주변국의 임금을 인하한다면 주변국의 고용률을 높여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공공 부채 비율을 줄여 나간다.

명시적 근거	6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러면 은행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해설	㉠의 원인 중 하나인 '은행 문제'는 주변국의 높은 공공 부채 비율로부터 시작되어 민간 은행의 신뢰까지 손상을 입히는 악순환이 핵심입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공공 부채 비율을 줄여 나간다면, '은행 문제'라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겠죠.
----	---

③ 유로 지역 전체에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이 구축되면 최적통화지역에 다가갈 수 있지.
해설	유로 지역이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 주변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핵심국의 재정 지출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유로 지역을 '최적통화지역'으로 만들어 ㉠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겠죠. 미리 생각한 것 중에서 '이상적인 해결책'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④ 핵심국으로부터 주변국으로의 자본 이동을 활성화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변국에 자본 투자가 끊긴 게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
해설	㉠은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국으로부터 주변국으로의 자본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어 ㉠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겠죠.  나아가 ㉠은 애초에 핵심국으로부터 주변국으로의 자본 이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것이기에, 이를 다시 활성화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⑤ 유로 지역 외부로부터 핵심국으로 노동 이동을 활성화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로 지역 외부에서 데려오면 주변국의 노동 이동은 더 힘들어지잖아.
해설	㉠의 핵심은 유로 지역 '주변국'에 실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유로 지역이 '최적통화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노동 이동'을 통해 이와 같은 주변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유로 지역 '외부'로부터 핵심국으로 노동 이동을 활성화하면, 주변국의 핵심국으로의 노동 이동 가능성을 오히려 낮출 것입니다. 이는 뒷글에 따른 ㉠의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노동 이동'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를 확실하게 납득하는 게 정말 중요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9. <보기>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B, C, D 국가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상상하고, 이들 국가에서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A국은 x통화, B국은 y통화, C, D국은 z통화를 사용한다. A와 B국 사이에만 노동 이동이 가능하다. 국가들 사이에 금융시장과 재정은 통합되어 있지 않다. A, C국은 목재를, B, D국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한다. 이 세계에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목재 수요가 감소하였다.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할 때 A, C국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B, D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보기>는 A, B, C, D 네 국가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들 국가에서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는 세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국은 x통화, B국은 y통화, C, D국은 z통화를 사용합니다. 즉, C국과 D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노동 이동'은 A와 B국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A와 B국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금융시장과 재정은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 '노동 이동'이라는 최적통화지역 조건만 고려하면 됩니다.

A, C국은 목재를, B, D국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하는데, 자동차 수요의 증가와 목재 수요의 감소로 인해 A, C국에서 실업이, B, D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 조정과 같은 수단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C국과 D국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C국과 D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립적 통화정책'도 불가능한데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한 것이니까요. 이 정도를 생각해놓고 선지를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① A와 B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으나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동 이동이 되면 해결할 수 있지.
해설	A와 B국에는 각각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필요로 하기에 단일 통화 사용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노동 이동'이 가능하기에,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할 것입니다. A국의 실업자들이 B국의 넘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식으로 '노동 이동'이 일어난다면 A국이 독립적으로 확대 통화정책을 펼치거나, B국이 독립적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먼델'이 '노동 이동'을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었죠?

② A와 C국에는 서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의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3번 문장, 4문단 5번 문장, 4문단 10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사한 충격이 발생했네. 그럼 노동 이동과 같은 조건만 갖추면 최적통화지역 될 수 있잖아.
해설	A와 C국에는 '실업'이라는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두 국가 사이에 서로 다른 독립적 통화정책을 선택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나아가 <보기>의 세계에서는 노동만이 생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똑같이 목재를 생산하는 A와 C국은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A와 C국은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기>의 상황에서 A와 C국은 '노동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노동 이동'이 가능하면 충분히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노동의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라는 말,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 모두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A와 D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노동의 이동도 불가능하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2번~3번 문장, 4문단 5번 문장, 4문단 10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번 선지랑 반대네.
해설	A와 D국에는 각각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A와 B국과 달리 노동의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높여 단일 통화 사용의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A와 D국은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번 선지의 상황과 정반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④ B와 D국에는 서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여 독립적 통화정책의 포기에 따른 비용이 없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5번 문장, 4문단 10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번 선지랑 똑같은 상황이네.
해설	이번엔 2번 선지와 똑같은 상황이죠? <보기>의 세계에서는 노동만이 생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A와 C국처럼 똑같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B와 D국은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것이예요. 이렇게 독립적 통화정책의 포기에 따른 비용이 없으므로 B와 D국은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C와 D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대칭적 충격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5번 문장, 4문단 10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로 지역 이야기구나.
해설	C와 D국은 z통화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 목재와 자동차라는 서로 다른 품목을 생산하기에 <보기>의 상황처럼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예요. C와 D국은 노동의 이동도 불가능하고 금융시장 및 재정도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깐요. 따라서 C와 D국은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보기>의 C와 D국은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z통화라는 단일 통화를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는 지문에 제시된 '유로 지역'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유로 지역'은 C와 D국처럼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억지로 사용하여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선지를 판단했다면 더욱 훌륭했을 것 같아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환율' 및 '통화정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납득하며 읽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물어보는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의 모든 문장, 문제의 모든 선지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해결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 3주차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10LEET [22~24] 인문 '권위의 역설' ☆☆☆

#### 1문단

①'권위의 역설'은 통상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두 요소인 '권위'와 '합리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들이라는 언명을 말한다. ②합리적인 행위란 그 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결과를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인 반면, 권위에 따른 행위는 행위 자체의 가치와 무관하게 '단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 즉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고의 구조가 상호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③몇몇 학자들은 결국 합리성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권위 개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④합리적 인간이라면 권위를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권위를 꼭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⑤만일 권위가 옳은 행위를 명하는 것이라면 굳이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한 근거로서 명령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런 행위를 명하는 것이라면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합당하게 근거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 ①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권위의 역설'은 인간의 도덕적 삶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권위'와 '합리성'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권위'라는 개념은 합리성이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첫 문단의 첫 문장부터 제시한 개념의 정의이니,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하며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 ② #재진술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합리적인 행위는 '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결과'를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고 해요. 행위 자체가 '합리적'인 가치를 지니는지를 바탕으로 행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에 따른 행위는 행위 자체의 합리적 가치와 무관하게 '명령이 가진 권위'에 따라 그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와 합리성은 서로 다른 실천적 추론의 구조를 전제하고 있기에, 즉 어떤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가 상호 모순적이기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천적 추론의 구조'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실천'을 위한 '추론'의 '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실천'을 어떤 이유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추론'하는 '구조'라는 뜻이죠. 이들이 상호 모순적이니, '권위'와 '합리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권위의 역설'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 ③~⑤ #주장 제시 #재진술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권위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성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권위 개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실천적 추론의 구조'가 다른 권위를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고, 꼭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권위가 옳은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합리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 행위를 할 것이기에 굳이 명령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는 권위를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결국 앞에서 했던 말들의 반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에 따르면 권위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납득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하이라이트 문장\*

②합리적인 행위란 그 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결과를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인 반면, 권위에 따른 행위는 행위 자체의 가치와 무관하게 '단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 즉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고의 구조가 상호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문장이 길어서 제대로 독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권위의 역설'이라는 내용이 재진술되는 양상을 파악하고 '실천적 추론의 구조'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장이 길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끊어서 천천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렵다고 그냥 넘기면 뒤에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 2문단

①이러한 주장에 대해 라즈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②권위의 역설이 담고 있는 논리는, 권위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A)가 합리성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B)와는 결코 화해될 수 없기 때문에 권위에 따르면서도 합리적인 것이란 마치 '둥근 사각형'과 같다는 것이다. ③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려면 우선 실천적 추론의 구조가 A이면서도 그 행위 수행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 $\pi$ )가 없어야 한다. ④만일  $\pi$ 가 제시된다면 "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 결과를 행위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말로는 B를 적절히 기술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이에 기초한 '권위의 역설' 자체도 흔들리게 된다. ⑤ $\pi$ 를 포괄하면서도 역설이 생기지 않도록 B를 적절히 재구성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⑥이에 따라 그는 우선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① #주장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이때, '라즈'라는 사람은 권위 개념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라즈의 주장'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권위의 역설에 대한 비판'이라는 한마디를 생각하며 읽을 준비를 해야 해요.

#### ② #재진술

앞 문단에서 이미 이해했듯이, '권위의 역설'이 담고 있는 논리는 권위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A)와 합리성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B)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둥근 사각형'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죠?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 ③~⑥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려면 실천적 추론의 구조가 A이면서도 그 행위 수행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 $\pi$ )가 없어야 합니다.  $\pi$ 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멈춰서 자세하게 생각해봅시다. A는 권위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예요. 즉, 어떠한 행위를 실천할 때 '특정한 권위'에 의존한 추론을 따르는 경우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행위 수행 과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B에 따르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pi$ 는 B가 아닌 A에 따르는 행위이니

다. 즉, A에 따라도 B에 따른 행위와 같은 행위(합리적인 수행 과정을 가진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A와 B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한 '권위의 역설'을 흔들 수 있습니다.  $\pi$ 를 포괄하면서도 역설이 생기지 않도록 B를 적절히 재구성, 즉 A와 B가 섞이는 방식의 재구성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앞에서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제시될 사례에 주목해야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③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려면 우선 실천적 추론의 구조가 A이면서도 그 행위 수행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 $\pi$ )가 없어야 한다.

4번 문장의 재진술과 엮어서,  $\pi$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A를 따르지만 결과적으로 B를 따른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였어요.

**3문단**

① 앤은 온종일 비정상적으로 극심한 업무에 시달린 후 피곤하였다. ② 그날 밤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평소 알아보고 있던 '투자할 건수'를 알려주었다. ③ 이 투자 제안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날 자정까지 투자 여부를 확답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④ 그녀는 너무도 피곤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⑤ 그래서 그 제안을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①~⑤ #사례-원리 연결**

'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온종일 비정상적으로 극심한 업무에 시달린 후 피곤했는데, 그날 밤 그녀의 친구가 그날 자정까지 확답해야 하는 투자 건수를 알려준 상황이에요. '앤'은 너무도 피곤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는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례가  $\pi$ 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앤'은 권위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에 따라 행동했지만, 합리적인 수행 과정을 거쳐 행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이렇게 사례와 원리를 연결지어서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로 넘어가야 합니다.

**4문단**

① 앤은 투자 거절이라는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행위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한 이유를 들어 행위하고 있음에도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③ 이에 대해 라즈는 앤의 행위도 실은 적절한 이유나 근거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④ 다만 이때의 근거는 '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보통의 행위 근거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지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다른 근거 중 어느 근거에 따라 것인지 즉 그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행위 근거들의 논리적 강도나 비중의 상대적 크기를 저울질함으로써 결정되지만, 앤의 행위는 그러한 저울 자체를 치워 버리게 하는 독특한 행위 근거에 따라 결정

상성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되고 있는 것이다. ⑥ 이는 보통의 행위 근거들보다 한 단계 위에 존재하면서 그러한 행위 근거들이 행위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상위의 행위 근거라 할 수 있는데, 라즈는 이를 '배제적 근거'라 부른다.

**①~②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미리 생각한 것처럼, '앤'은 행위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한 이유를 들어 (=B에 따르지 않고) 행위하고 있음에도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i$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사례는 왜  $\pi$ 가 된 것일까요? 자세하게 알아보시다.

**③~⑤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라즈'는 이에 대해 '앤'의 행위도 실은 B처럼 적절한 이유나 근거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네요. 다만 이때의 근거는 투자 제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보통의 행위 근거와는 구별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행위 근거들이 그 논리적 강도나 비중의 상대적 크기가 저울질한 결과 도출되는 것이라면, '앤'의 행위는 그러한 저울 자체를 치워 버리게 하는 독특한 행위 근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죠. '앤'은 애초에 투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들을 저울질하지도 않고 투자를 포기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너무도 피곤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적절한 이유나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⑥ #사례-원리 연결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렇게 저울을 치워 버리는 방식의 행위 근거는 보통의 행위 근거들보다 한 단계 위에 존재하면서 보통의 행위 근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곤하기에 아예 저울을 치워버리겠다'라는 행위 근거는 '투자 제안 검토'라는 보통의 행위 근거들보다 한 단계 위에 존재하면서 후자가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례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겠죠? 라즈는 이를 '배제적 근거'라 부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보통의 행위 근거들을 '배제'하는 상위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지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다른 근거 중 어느 근거에 따라 것인지 즉 그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행위 근거들의 논리적 강도나 비중의 상대적 크기를 저울질함으로써 결정되지만, 앤의 행위는 그러한 저울 자체를 치워 버리게 하는 독특한 행위 근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던 '앤'의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3문단의 사례와 엮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6번 문장에 제시된 '배제적 근거'가 당연하게 납득될 정도로 말이예요.

**5문단**

① 그런데 이러한 '배제적 근거에 따른 행위 수행'이야말로 바로 권위에 따른 행위에서의 실천적 추론의 구조(A)라 할 수 있다. ② 왜냐하면 권위는 그 개념상 명령된 행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수명자(受命者)의 판단에 행위 수행 여부의 결정을 맡기지 않으며, 수명자는 행위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행위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한 이유에서 행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③ 다

시 말해 명령된 행위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근거들은 권위에 따른 행위에서의 실천적 추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①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앤'의 사례는  $\pi$ 였습니다. 즉, 실천적 추론의 구조가 A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미리 생각한 것처럼, '배제적 근거에 따른 행위 수행'은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사례와 엮어서 미리 생각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②~③ #재진술**

그렇다면 왜 '앤'의 사례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가 A인 상황일까요? '권위'는 그 개념상 명령된 행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수명자(명령을 받는 사람)의 판단에 행위 수행 여부의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수명자는 그저 명령이 있었기에, 행위 자체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행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A의 핵심이에요. 즉, 애초에 A를 따르는 순간 행위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근거들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배제'되는 것이죠. 이러한 A의 역할은 '배제적 근거'와 같기 때문에, '앤'의 행위는 A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제'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다시 말해 명령된 행위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근거들은 권위에 따른 행위에서의 실천적 추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배제'라는 '진짜로' 같은 말을 바탕으로, '앤'의 사례와 '배제적 근거'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6문단**

①결국 배제적 근거에 따른 행위 수행 사례가 호소력을 갖는 한, 더 이상 권위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구조를 들어 권위와 합리성이 개념적으로 양립 불가능함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②권위에 따른 행위가 합리적일 수 있는 개념적 여지가 바로 배제적 근거의 존재에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①~② #재진술**

이러한 '배제적 근거'에 따른 행위 수행 사례가 호소력을 갖는다면, 더 이상 A를 들어 권위와 합리성이 양립 불가능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권위의 역설'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pi$ 라는, A와 B가 격렬히 섞일 수 있는 개념적 여지가 바로 '배제적 근거'의 존재에서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라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마디만 하는 것이었죠? 이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22. 윗글의 '권위의 역설'이 함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㉓**

- ㉑ 누구도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권위에 따를 수는 없다.
- ㉒ 권위가 실천적 추론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권위의 역설 그 자체네.
해설	권위와 합리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권위의 역설'의 핵심입니다. 이는 권위와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의 과정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이었죠. '권위의 역설'의 정의 그 자체 이기에 두 선지 모두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어요.

- ㉓ 합리성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권위 개념에 기초해서도 합리적 행위에 대한 기술은 가능하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pi$ 잖아.
해설	권위와 합리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권위의 역설'의 핵심입니다. 권위 개념이 기초해서도 합리적 행위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권위의 역설'을 반박한 '라즈'의 논증, 정확히는 '권위의 역설'에 반박하기 위해 '라즈'가 제시한 사례인 $\pi$ 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 ㉔ 합리적인 행위자는 권위에 따라 행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권위에 반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㉕ 명령된 행위를 숙고한 끝에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명령자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옳은 행위라면 따라야지. 이 건 권위에 따르는 게 아니고.
해설	합리적인 행위자는 권위에 따른 명령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행위인지 아닌지 숙고한 끝에 가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 그 행위를 행합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행위자는 권위에 따라 행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권위에 반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령된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꼭 그 권위에 따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핵심은, 이런 이유로 인해 몇몇 학자들은 '합리성'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권위' 개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이죠? '라즈'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한 것이었구요. 1문단에서 시작된 지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23. 뒷글에 제시된 ‘배제적 근거’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④

- ‘배제적 근거’라는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뒷글에 제시된 ‘배제적 근거’에 따르는 것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저울질을 아예 배제하고 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지 않는 것, 즉 ‘저울질’을 하는 경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④ 옳지 않은 행위는 양심에 비추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우

명시적 근거	4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울질하고 있네.
해설	‘옳지 않은 행위’를 ‘양심’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저울질’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배제적 근거’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경우, 우리가 찾고 있던 경우 그 자체네요.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 ① 약속한 일은 그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우
- ② 설령 도덕에 반하는 법이라 해도 그것이 금지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우
- ③ 설령 오심이라 할지라도 판사의 판결에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우
- ⑤ 상관이 지시한 일은 이유 불문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우

명시적 근거	4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다 배제되고 있네.
해설	각각 ‘약속’, ‘법’, ‘판사의 판결’, ‘상관의 지시’라는 행위 근거가 다른 보통의 행위 근거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는 저울질을 하지 않고 아예 저울 자체를 치워 버리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배제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24. 뒷글에 나타난 ‘라즈의 논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라즈’는 A에 따르면서도 그 행위 수행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 즉  $\pi$ 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권위의 역설’이 함축하는 바를 반박하는 논증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관식으로 미리 답을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① 행위 근거의 구조적 차원을 재구성하여 권위 개념을 정합성 있게 수정함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권위 개념이 아니라 합리성 개념을 수정한 거지.

해설	라즈가 행위 근거의 구조적 차원을 재구성한 것은 맞습니다. $\pi$ 는 합리성과 관련된 행위 근거의 구조적 차원을 권위와 엮어 재구성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는 합리성 개념이 전제하는 실천적 추론 구조, 즉 B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지문에서 권위 개념은 결국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쉽게 지워낼 수 있습니다.
----	--

② 권위에 따른 행위를 유형화하여 그것이 현실적으로 합리화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함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뭔 소리야.
해설	라즈는 권위에 따른 행위를 유형화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합리화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권위에 따른 행위가 합리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네요.

③ 실천적 추론 구조를 분석하여 권위에 따른 행위가 합리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함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라즈’의 논증은 결국 $\pi$ 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권위에 따르는 실천적 구조, 즉 A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즈’는 이렇게 권위에 따른 행위가 합리적일 수 있는 개념적 여지를 확보하여, 권위에 따른 행위가 합리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하는 ‘권위의 역설’을 반박하고 있어요. 미리 생각한 내용 그 자체이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④ 실천적 추론 구조가 다른 사례를 권위 개념에 유추 적용하여 권위의 역설을 해소함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실천적 추론 구조가 같은 사례를 이용한 거지.
해설	라즈가 제시한 $\pi$ 는 A라는 실천적 추론 구조, 즉 권위 개념의 실천적 추론 구조를 이용하여 ‘권위의 역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실천적 추론 구조가 ‘같은’ 사례를 권위 개념에 유추 적용하는 것이죠.

⑤ 권위의 역설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여 권위에 따른 행위가 옳은 행위로 귀결됨을 입증함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권위에 따른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권위의 역설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지.

해설	<p>'라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권위에 따른 행위가 합리적일 수 있는 개념적 여지가 '권위의 역할'에 대한 반례인 '배제적 근거'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지, 권위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옳은 행위로 귀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라즈는 옳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즉 화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가볍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p>
----	--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으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라즈'라는 사람의 한마디를 끊임없이 재진술하는 형태의 지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추상적인 내용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읽어나갔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